광주 민간건축 분쟁·사기…입주자만 '등 터진다'

신탁사·시행사 관리권 갈등에 주차장 막고 입주민 출입 통제
임대주택 사기분양에 '발 동동'…피해금 회수 여부도 불투명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인지 광주지역에서 민간 건축사업과 관련한 분쟁과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19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오피스텔 'ST174쥬네센트로'(지하 2층~지상 11층, 230세대) 앞에서 용역업체 직원 30여명이 차량을 동원해 주차장 진입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 소유자인 A신탁사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봉쇄하고, 오피스텔에 출입하려는 입주자 한 명 한 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오피스텔에서는 지난 4월 시공사 B건설회사가 부도나면서 A신탁사와 시행사 간 관리권에 대한 갈등이 빚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 위탁사와 관리업체측은 일단 암묵적 동의를 거쳐 잔여 세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내놓으며 입주를 진행했다. A신탁사 측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를 내 준 것이 일종의 '신탁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해당 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책임준공형 신탁으로 추진됐는데, 당시 시공사의 책임준공기간은 지난 2023년 1월, 신탁사는 2023년 6월까지로 건설사가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일종의 보증을 선 신탁사가 금융비용 등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다.

시행사 측은 A신탁사 측이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하고 위협, 통제한 점을 수사해 달라며 A신탁사를 업무방해 및 거주권 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당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나 관리권 분쟁이 민간 간 사안이라는 점에서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광주시 동구 무등산 일대 민간임대아파트 '고운라피네'에서도 분양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조합 측은 '프리미엄' 상승 가능성, '민간협약 체결' 등의 내용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는 협동조합법에 따라 발기인 5인 이상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해 민간임대 주택을 건설 한 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형식인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업무추진용역사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막바지 수순이며 영장 청구와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을 맡았던 업무추진용역사 대표는 지난 4월 존속살해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자금 추적 결과 현재 대부분의 자금은 전 사업의 빚 상환, 내부 수당 지급,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남은 자금이 없어, 피해금 회수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20명, 피해액은 66억원에 달한다.

광주시 남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최근 자금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합원들은 최근 조합장이 '자금을 횡령하고 잠적했다'고 주장하는 등 조합 임원진을 수사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토지 80% 매입' 문자를 발송한 것과 달리 대행업체 일부는 폐업처리됐으며, 확보된 토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광주시 남구 주택과 담당자는 "주택 사업을 둘러싼 문제는 항상 제기돼왔지만 최근들어 피해 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며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결국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분양 등 계약에 앞서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숲속 생태계 배워요 23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영산강대상근린공원 내 유아숲 체험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곤충을 관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건보공단 '스마트 장기요양' 앱 첫날부터 접속 장애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업무 처리 시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가 23일 개시됐지만 오류 발생에 따른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이날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동시 접속자 증가로 신규 모바일 앱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공단은 "앱 지연으로 급여제공 기록을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기 기록지 작성을 해달라"며 "앱 정상화가 되는대로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장기요양앱은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내용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앱이다.

건보공단은 기존에 2개로 운영하던 관련 앱을 통합해 이날 0시부터 '스마트장기요양'이라는 새로운 앱을 공개했는데 작동에 문제가 발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앱 사용 첫날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다"며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공의·의대생들, 복귀 앞서 대국민 사과부터"

환자 단체, 재발 방지 약속 촉구

최근 일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복귀 의향을 밝히는 데 대해 환자 단체가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부터 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3일 논평에서 "여전히 국민과 환자의 피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하며 이렇게 밝혔다.

연합회는 "당신들이 떠난 그 시간, 환자와 국민은 어디에 있었는가. 단 한 번이라도 그 고통과 두려움에 공감했는가"라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물으며 "환자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반성과 사과,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의 복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건, (대표) 단체가 침묵했건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며 "복귀 의사를 내비치기보다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에는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 조사기구 발족 ▲진료 중단에 대한 보상제도 신설 ▲의료공백 재발 방지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광주교사노조 조합원 65% "정당 가입 의사 있다"

광주교사노조 소속 조합원 교원의 65%가 정당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달 18~20일 노조 소속 교사 19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93명 중 '교원에게 정당 가입의 자유가 주어지면 정당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사람이 65%였다.

'정치기본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가입은 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35%였다.

정당 가입 의사가 있는 교사 384명 중 309명은 '당비만 내고 당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직을 맡겠다'거나 '공직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적극적인 활동 희망자는 20%였다.

정당 가입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 중 68%는 더불어민주당을, 15%는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 교사노조의 설문조사는 네이버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30%였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 5·7급 민간 경력자 경쟁률 21대 1 '소폭 상승'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5·7급 민간 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경쟁률이 21대 1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선발 대상자는 157명, 지원자는 3304명이다. 5·7급 민간 경력자 채용 경쟁률은 2022년 14대 1, 2023년 16.9대 1, 지난해 20.1대 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직급별로는 40명을 뽑는 5급 공무원 시험에 1010명이, 117명을 선발하는 7급 공무원 시험에 2294명이 지원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7세로 집계됐다. 30대가 1777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982명(29.7%), 20대 406명(12.3%), 50세 이상 139명(4.2%)으로 뒤를 이었다.

필기시험은 다음 달 19일 치러진다. /연합뉴스